

전문가 코칭
한양대학교 방만기 연구교수
윤리경영을 가로막는
세습자본주의

윤리 연구소
세습기업 백년제국,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과
전문가인식 분석

기업윤리 브리프스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전문가인식
2017
03



방만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윤리경영을 가로막는 세습자본주의

Q

세습자본주의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가 부(富)와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세습자본주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부가 대물림되는 관행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업소유권이 세대를 거듭해서 승계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기업승계나 사업승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기업승계(family business succession)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제과기업 마르스, 독일 자동차기업 BMW 등이 대표적인 세습을 통한 가족경영기업이다.

기업세습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다. 소득대비 자본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소득의 파이가 커지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소위 세습자본주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가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감소시키고 비민주적인 소수지배가 생겨나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저성장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둘째, 소수의 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계세습프로그램을 통해 경영능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이 장기적으로 기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일 무능력한 세습경영인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 재벌기업들의 과잉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한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셋째, 순환출자 고리의 문제와 기업세습과 연관된 각종 조세회피와 편법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습 기업인은 한 계열사의 지분으로 나머지 계열사에 영향력을 끼쳐 실질적인 소유주로 강력한 경영권을 행사하여 일감을 몰아주거나 기업의 공적자금을 동원해서 기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를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Q

윤리경영이 세습자본주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세습자본주의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과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율부과가 필요하다. 가령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강화시켜 최고경영인이 사회적 책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조세제도 개혁은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세습자본주의 폐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한편, 기업승계과정에서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시키는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세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정법을 포함한 윤리경영의 위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인데 차등의결권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자본의 기득권이 인정되지만 동시에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정책을 고안했다.

기업승계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은 규제의 일관성과 사회적 책임이다. 독일에서 가족소유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90%를 차지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약 60%를 책임질 정도로 일반적 형태이다. 이들 기업이 가업을 승계해서 계속 일자리 규모를 유지하면 일률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비즈니스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조치고, 또한 일자리보호에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가족기업도 윤리경영의 틀 안에서 고용유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상속세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업승계과정에 있는 기업은 정부의 엄밀한 실사가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한다.

부를 물려준다

‘흙수저’, ‘금수저’는 이제 뉴스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흔한 말이 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부의 세습’이 큰 관심사이다. 특히 기업경영권의 계승, 고용 세습 등은 그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다. 결국 이는 기업 내외부의 문제로 이어지고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습의 현주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 2014년 한국의 부자들 중 74.1%가 부를 세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세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 어린 주식부자



2015년 10월, 1억 원 이상의 주식자산을 가진 미성년자들을 공개했다. 262명의 미성년자들이 총 1조 58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존의 미성년 주식부자들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지만, 상장사 오너 일가에서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H 제약사 회장의 12살짜리 손자였고, 2~7위까지도 H 제약사 회장의 손자, 손녀들로 확인되었다.

▶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대기업 H사는 임직원은 중소기업 정규직의 두 배 이상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H사와 노조 간 단체 협약에 고용세습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단체 협약의 내용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그 가족 중 한 사람을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약을 가진 것이 H사 뿐만이 아니란 것이다.

2016년 6월, 고용노동부는 상위 30대 기업 중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곳은 11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겐 시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 말과 2017년 2월 진행된 조사 결과, '우선·특별채용'조항을 가진 742곳 중 366곳만이 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습의 문제점

정당치 않게 부를 세습한 이들 중에는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고 갑질과 같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일탈 행위의 뒷수습을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된다.

▶ 재벌 2세, 3세 들의 갑질 논란



재벌 후계자들의 폭행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10년 S사의 재벌 2세의 멧값 폭행 사건은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었고, 2016년 D사의 재벌 2세는 술집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기물파손죄로 처벌 받았다.

자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도 끊이지 않는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며, 또 다른 D사와 H사의 재벌 3세들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갑질로 논란이 되었다.

정당한 세습을 위한 노력

부나 경영권의 세습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후계자가 그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습에 대한 비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당한 세습이란 무엇일까?

▶ 그룹의 상속세

2016년 9월, O그룹의 명예회장의 별세로, 그 아들이 회사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상속 받은 주식은 약 3000억 원. 상속세만 15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O그룹의 새로운 회장은 5년에 걸쳐 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 사이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었다.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2000년,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가 세운 빌&멜린다 재단은 전 세계의 빈곤과 질병 퇴치, 교육 등을 위해 일한다. 이 재단의 목표는 보유금 400억 달러를 빌과 멜린다가 살아 있는 동안 모두 소진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는 워런 버핏도 이 재단에 기부를 하며 재단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빌과 멜린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정되어 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빈곤 퇴치 등에 쓰이기보다 소액 기부 처리를 위한 직원고용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소액기부를 받지 않고, 그 대신 전세계 대부호에게 'The Giving Pledge'운동을 통해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을 상속한 후 5년간 운영을 지속하며 일자리와 임금을 유지하면 상속세의 85%를, 7년 이상을 유지하면 전액을 면세해준다. 후계자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능력과 오너십을 가지고 고용창출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 한다면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듯 부의 세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책임'이다.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절차와 경쟁을 통해 부를 세습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모를 통해 얻게 된 부, 회사, 일 자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책임을 다한다면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세습기업 백년제국,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스웨덴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매년 톱5 안에 들 정도로 기업투명성이 높고 부패와는 거리가 먼 나라다.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몇몇 주요 기업들에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편인데, 그 중 하나가 5대째 세습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발렌베리 그룹이다. 우리에게 세습이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에, 5대 세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발렌베리 가문의 독특한 경영 철학과 방침을 이해하면 발렌베리 제국이 백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저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160년 6대 세습을 눈앞에 둔 발렌베리

발렌베리 가문이 스웨덴 경제사에 등장한 것은 1857년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스웨덴 최초의 근대적 상업은행인 스톡홀름 개인은행(SEB)을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면서부터다. 1916년부터는 새로운 투자회사 인베스트르를 설립하여 지주회사로서 기업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2대 경영에서 만들어진 발렌베리의 독특한 '2인 지배체제(two-top system)'는 두 사람의 후계자가 금융과 산업을 나눠 맡으면서 그룹을 이원 지배하는 방식이며 현재 6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 최전성기였던 1970년대에는 스웨덴 산업인력의 40%를 고용했고 스톡홀름 주식시장 총액의 40%를 차지했다. 발렌베리의 포트폴리오 산업체는 금융, 가전, 통신, 항공기 및 자동차, 전력, 산업 기계, 제약 등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총생산량은 스웨덴 GDP의 약 30%에 이른다. 경영세습과 막대한 부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발렌베리 그룹이 국민기업이 된 까닭은 160년 간 '기업의 생존 기반은 사회'라는 창업자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다

발렌베리 그룹은 경영에 적합한 인물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치밀한 후계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2명을 후계자로 선정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후계자들에게 특권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고 '존재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Esse non videri)'는 가문의 모토에 따라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금기시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인 크누트 아가톤 발렌베리(2대)는 1차 세계대전 중 외무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의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웨덴 국채의 해외 발행을 지원하였다. 또한 리올 발렌베리(4대)는 2차 세계대전 말 외교관 신분으로 헝가리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이송과 학살을 막아 무려 10만 명의 목숨을 구한 '스웨덴의 선들러'였다. 발렌베리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은 스웨덴 국민들에게 애국적이고 기품 있는 가문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 소유 대신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

5대 세습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이 없는 것은 재단을 정점에 둔 피라미드식 소유구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크누트-엘리스/마리안-마르쿠스/마르쿠스-아말리아 등 대표적인 3개 발렌베리 재단이 지주회사 인베스트르의 42.9%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발렌베리 그룹은 매년 그룹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초기술과 학술 지원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데, 창립 100주년의 크누트-엘리스 발렌베리 재단이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은 135억 크로나(약 2조 300억 원)에 이른다.

발렌베리 그룹은 막대한 세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소위 '황금주'라고 불리는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아 기업 경영권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발렌베리는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사상생을 실천한다. 스웨덴의 노조는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로 에릭슨의 이사회 멤버 15명 가운데 6명이 노동자 대표로서 노조와 경영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발렌베리 그룹의 투명경영과 사회공헌

발렌베리 그룹이 외형적인 기업규모나 경쟁력보다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그들의 경영철학이다. 이것이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만든 원동력인 것이다. 스웨덴 정부가 나서서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발렌베리 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각별하다. 발렌베리 그룹은 유통이나 식품 등 이른바 중소기업형 사업 분야에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윤에만 집착하는 기업이 아니다. 엄청난 경제 집중도를 갖고 있지만 증여·상속 과정에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다. 발렌베리 그룹은 지주회사 산하 기업들의 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가문 구성원이 계열사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투명한 독립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자회사에 투자해 주식시장 상장으로 막대

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발렌베리는 경영인 우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일임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적극적 오너십'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발렌베리는 그 내면의 경영철학, 기업가 정신,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에게 신선한 화두를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노사화합의 평등한 사회적 문화는 발렌베리 그룹이 80년 전부터 숭선수범해왔기에 가능한 것이며 기업신뢰도가 바닥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과 전문가인식 분석

보고서
리뷰



재벌관련뉴스는 분식회계나 비자금 사건, 후계구도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나 유산상속, 재벌들의 갑질 행패 등 그 내용이 다양하고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부분도 있다. 전문가나 국민들이 재벌소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가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펴낸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과 2015년 전문가인식도 분석」(위평량 저, 경제개혁리포트 2015-04) 보고서는 △재벌의 부와 경영권 세습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세습경영인의 개인적인 경영능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분석하고 있다.

▶ 분석대상과 분석방법

보고서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3개 중 총수가 있는 40개 기업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재벌총수자제 11인을 대상으로 50명의 평가전문가집단(대학교수 18명, 주요 민간 연구소 전문가 12명, 자본시장 펀드매니저 11명, 증권분석가 9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4개의 설문항목은 일반론(8개), 소유권승계과정(2개), 경영능력(13개) 및 도덕성(1개) 등이다.

▶ 경영세습을 둘러싼 쟁점들

재벌그룹의 경영세습은 △선대에 축적된 재산을 상속받는 부의 대물림과 △그룹계열사 전반에 대해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을 상속받아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면 정당성이 확보되지만 여러 편법적인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후자의 경우 세습당사자의 경영능력이 문제가 된다.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세습경영인의 무능력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시스템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내부 경영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모든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 상호경쟁을 통해 검증된 인물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 재벌승계에 관한 일반론 분석

①전문가 집단은 경영권이 총수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56.0%)이 바람직하다는 응답(14.0%)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날 정도로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이다. ②총수자녀의 경영권 승계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58.0%)이 긍정적 응답(6.0%)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③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36.67%), △불법편법상속(30.83%), △경쟁 없는 승계(19.17%), △승계 과정의 불투명성(13.3%) 순으로 응답하였다. ④경영권의 자녀승계에 따른 장점으로는 △경영권 안정에 기여한다(47.17%), △해당기업의 예측가능성에 도움을 준다(39.62%), △충분한 경영수입(9.43%), △과당경쟁 해소(3.77%) 순으로 응답했다. ⑤소유권 승계과정 중 발생한 문제가 향후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90%)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다. ⑥총수일가 개인이 저지른 위법행위

(횡령, 배임 등)가 그룹 경영권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에 중요하다(86%)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⑦총수일가 개인의 도덕성(횡령·배임 등 경제사건 제외한 기타 범죄경력 등)이 그룹의 경영권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는 질문에 중요하다(73.5%)는 응답이 높다. ⑧경영권 승계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는 △경영능력(47.27%), △소유권 승계과정의 적법성(31.27%), △승계자의 도덕성(21.47%) 순으로 응답했다.

▶ 조사대상자 개인별 평가분석

후계자들의 개인적인 경영능력 평가는 100점 척도로 평균 35.7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경영후계자들에 대해 낙제점을 줄 정도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임원승진 시점 및 직위 등을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73%가 '지배주주 또는 회장의 판단'을 지적한 반면, '나이', '경영능력', '경영수업연수'는 각각 5.89%, 4.58%, 3.59%로 나타나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재벌 그룹 후계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후계육성 프로그램

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재벌그룹 총수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셈이다.

▶ 경영권 세습이 주는 시사점

세계 최대의 운송/에너지 기업인 덴마크의 AP 윌러 머스크의 경우 가족재단이 의결권의 60% 이상을 갖고 있다. 창업자 개인지분을 대부분 재단에 귀속시켜 가문의 공동재산으로 관리하면 후계자들의 지분 싸움을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이 다른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방어벽을 쌓는 효과가 있다. 유럽 가족기업의 경우 엄격한 후계자 선발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나오고, 세계 시장에서 그들의 역량을 입증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된다. 우리도 이러한 기업승계 문화를 빨리 정착시켜 재벌의 세습경영 때문에 국민들이 반기업정서를 표출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투명경영과 준법경영이 필요하고, 승계과정에서 세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두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윤리경영
Step by Step

도입기 2단계 - 윤리경영조직의 구축

저희 사장님이 임직원들에게 앞으로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이 윤리경영임을 선포하셨습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할 조직을 설치하고자 타기업 사례를 조사하라고 하십시다. 윤리경영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또 타기업은 어떻게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도?

로그래의 작성 및 관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치,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및 징계 등 윤리경영 실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한화케미칼>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을 시작하시는군요. 우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윤리관에 맞는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기 위한 조직이죠. 윤리경영위원회는 기업 내의 윤리담당 부서의 하나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각종 업무와 실천을 감독하기 위한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또는 '윤리경영실' 등의 담당부서를 설치합니다.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는 윤리규범의 제·개정, 윤리상담, 홍보 및 운영, 임직원의 윤리교육 프

이 기업은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산하 조직으로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을 설치하였고, 윤리경영 실천위원을 각 팀장으로 임명하여 윤리경영조직을 적절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윤리경영조직은 구성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Step에서는 윤리규범을 만드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동향

1 공정위, 쉐어링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30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쉐어링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칩세트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쉐어링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협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쉐어링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참고: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228000741>

2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8일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2017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반부패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직자 청렴 의식을 내면화하며, 민·관이 반부패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구조적인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참고: <http://www.fnnews.com/news/201702080953210284>

3 금융위,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동일 외부감사인 선임 시한인 6년을 넘어섰다. 기업 경영성과 분석 사이트인 CEO스토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483개 기업의 2015년 말 기준으로 같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긴 기간은 평균 6.8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월 22일 상장회사가 6년간 동일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면 이후 3년 동안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입법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4/0200000000A>

[KR20170124187800003.HTML?from=search](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4/0200000000A)

국내행사

리더스 모닝포럼

주최: 한국능률협회

일시: 2017년 4월 7일

장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내부감사 수행기법 교육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일시: 2017년 3월 13~15일

장소: 한국생산성본부(서울)

해외동향

1 英롤스로이스, 뇌물 혐의로 9600억 벌금 합의

영국 항공엔진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가 뇌물 관련 혐의로 영국, 미국, 브라질 등에 6억7100만 파운드 벌금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에 4억 9720만 파운드를, 미국과 브라질에는 각각 1억 7000만 달러와 256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롤스로이스는 "이날 미 법무부, 영국 중대부정수사국(SFO), 브라질 연방정부와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의 부패 혐의와 관련해 기소 유예 협정을 맺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롤스로이스가 사업 주수를 위해 불법적으로 중개인을 고용하고 일부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참고: <http://edition.cnn.com/search/?text=bribery>

2 美·英, '러 자금세탁' 도이체방크에 벌금 7350억 원 부과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합동으로 도이체방크의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DFS는 4억 2500만 달러, FCA는 2억4백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2011~2015년 러시아 고객들이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루블화로 주식을 산 직후에 같은 주식을 런던에서 되팔아 달러화를 챙기는 '미러 트레이딩'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http://money.cnn.com/2017/01/17/news/economy/deutsche-bank-fine/index.html>

3 스위스 세계적 금 제련 기업, 국제범죄 연루혐의



'스위스의 화려한 금 제련 기술 뒤에는 피 묻은 금이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스위스 금 제련 산업이 자금 세탁과 전범 지원, 인권 유린 같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르그르헤라우스는 콩고의 무장 세력이 약탈한 금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해 스위스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발캄비는 부르키나파소의 금광에서 어린이들이 채굴한 금을 수입해 아동 인권 유린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의회는 자국 금 제련 기업들에 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인권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참고: <http://news.donga.com/List/3/0201/20161230/82101750/1>

해외행사

SCCE's European Compliance & Ethics Institute

유럽 컴플라이언스 & 윤리 포럼

주최: Society of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s(SCCE)

일시: 2017년 4월 2~5일

장소: Prague, Czech Republic

The 5th Responsible Business Summit NY 2017

제5차 책임 경영 정상회의

주최: Ethical Corporation

일시: 2017년 3월 27~28일

장소: New York, U.S.

Q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甲, 乙,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직원 B는 제3자(A회사)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3자(A회사)를 위한’ 부정청탁(제23조제2항)임과 동시에 ‘제3자(C)를 통한’ 부정청탁(제23조제3항)인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이 아니라 제23조제2항이 적용됨

- ▶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24조).
- ▶ 사업가 C는 제3자(A)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2항).
- ▶ 甲은 담당공무원 乙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회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乙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 ▶ 乙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제7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고용제습 등의 특혜로 인해 발생하는 비윤리적 문제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동자어게
물었습니다

광고회사 N 사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내정치라고 봅니다. 실력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공정한 회사가 아니므로 임직원은 필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견 제시, 사업 기획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줄타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에너지 관련 업체 B 대리

아무래도 그 과정이 깨끗하지 않은 게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법에 위배되는 부분 없이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인사비리 같은 게 얽혀 있으니까요. 결국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회사의 전 직원이 함께 지게 됩니다.

맞춰보세요

다음 중 스웨덴의 세습기업 발렌베리만의 독특한 경영 체제는?

- ① One-Top System ② Two-Top System ③ One-Servant System ④ Two-Servant System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kwb1212@korea.kr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1번 지난 호 정답자는 신광진님, 허강화님, 서은정님, 안이규님, 정보미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